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을 저지하자

조수진(인천 중등남부지회·신흥중)

9월 1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현 대판 노예법”, “노동 대참사”로 불리는 이번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야합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퇴직 전 임금 삭감으로 ‘공짜’ 노동을 강요 받는 임금피크제는 물론, ‘맘대로 해고’의 알리바이가 될 저성과자 개별 해고 허용,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범위 확대로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정당성을 부여해 줬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번 합의를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에 견주며 치켜세웠다. 그러나 이 둘은 ‘임금 덤핑’, ‘시간제 노동 폭증’ 등 독일과 네덜란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 것으로 악명 높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을 명분 삼아 공격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박근혜는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독촉했다.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 9월 16일 정책의 원총회를 열어 ‘실업수당 대상자 축소’, ‘기간제·파견근로 확대’ 등 노사정 합의문에 없는 내용까지 포함시킨 노동관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9월 23일 총파업과 그 이후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으로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공격을 밀어붙이게 됐지만, 그렇다고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형세를 뒤집어 분위기를 반전시킬 잠재력을 지닌 민주노총의 투쟁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발표 직후 이를 ‘합의’가 아니라 ‘야합’으로 규정하고 지도부 삭발식,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 등을 열어 항의했다. 9월 19일 서울에서 7천 명 규모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9월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500명이 결의대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열린 긴급 중집은 9월 23일 ‘전 조합원 서울 상경 하루 총파업’을 결정했다.

급속노조 산하 기아차·현대차 노동자들은 파업 찬반투표 가결로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날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변성호 전



교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복무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기층에서 되도록 많은 조합원들이 9.23 파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물론 9.23 하루 파업으로 지배자들이 “노동개혁”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배자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후속 투쟁 계획이 배치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11월 투쟁을 말한다. 어차피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가이드라인으로 당장 추진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속수무책이다. 또, 국회 대응에 치중하면서 투쟁을 부차화시킬 위험이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에서도 봤듯이, 국회 논의 기구는 “일방적”이지 않은 모양새를 띠 뿐,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기는 매한가지다. 게다가 국회 대응에 치중하면 새정치연합과의 공조에 매달리게 되기 쉽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토끼몰이식’이라며 일방성은 비판하지만, 그 내용을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과 노동자에게 ‘일방적’ 고통분담”을 문제 삼을 뿐 고통분담 그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총파업에 돌입한다 해서 노동시장 개악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속전속결에 제동을 걸면서 좀 덜 불리한 조건에서 투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투쟁이 정권의 정치 위기와 맞물리면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세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당장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지도부가 배신적으로 타협하자, 기업주 언론들은 즉시 교사·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의 구체 일정을 제시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은 쫓아내는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라.]”(《조선일보》 9월 16일자)

“최근 노동개혁 논의 속에서도 교사들은 제외돼 있다. 정년보장에 은퇴하면 두둑한 연금까지 받는 데도 임금피크제는 무풍지대다. 정부는 정확한 교원평가를 바탕으로 ‘저(低)성과 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전직(轉職)이든, 면직이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동아일보》 9월 17일자)

이렇듯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세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실로, 정부는 성과급·교원평가를 악화시켜 교사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관련 기사 4면 참조)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교원을 구조조정하려

한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 예산을 1조 5천억 원이나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 2조 원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청년 일자리를 증대하겠다고 시간제 교사 5백 명을 신규 채용 및 확대하겠다고 한다. 교부금 지급 기준을 학생 수로 바꿔 강원·전남·경북은 초등학교의 절반이 폐교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정 개정과 국정화를 통해 시장주의와 국가주의를 찬양하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 한다.

물론 정부 공격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발이 거세져 초등학교 한자병기와 안전교과 신설은 늦추거나 포기했다. 한국사 국정화 반대 여론도 거세다. 9월 17일 현직 교사 1만 5천7백여 명이 한국사 국정화 반대 성명을 냈다. 전국 14곳(울산·대구·경북 제외) 시도교육감들도 공동으로 ‘정부의 2015 교육과정 개정 중단’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대·고려대·덕성여대·부산대 교수들이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도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세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8월 28일 전교조 대의원대회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 하반기에도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활동가 연가 투쟁도 결정했다.

▶ 3면으로 이어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권력과 자본의 교육 내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박근혜 정권이 교육과정을 개악하고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 한다. 김현옥 <벌떡교사들> 편집팀원이 **진영호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 (왼쪽 사진)을 만나 정권의 의도와 향후 대응 방안을 들어 봤다. — 편집자 주

Q.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2015교육과정의 핵심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작은 의도는 어떤 정권이든 정권을 잡으면 민심의 숙원 사업이랄까 이런 것을 해결해주는 정치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할 때 교육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학입시제도 문제였다. 입시에 의해서 교육이 좌우된다는 것을 안다. 대학입시제도 간소화 공약이 나온 이유다. 당선 후 수능 체제 논의를 하다가 수능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능 체제는 바뀐 게 없고 교육과정만 문·이과 통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큰 의도를 파악하려면 현 정권을 넘어 우리나라 자본이 권력이 교육과정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 왔는가 하는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해방 후부터 전두환 정권을 거쳐 노태우 정권에 이르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주의적 교육과정이 중심이었다. 보수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데올로기 교육을 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부를 통해서 출세를 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경쟁 구도가 지배해 왔다.

그러다 1995년 5·31교육개혁에 따라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교육 전체를 바꿨는데 당시 화두가 세계화였다. 이는 다른 말로 자본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시장이 아니라 국제 시장을 봐야 했고, 정치권의 가장 큰 메시지는 세계화(자본의 세계화)였다. 자본의 세계 진출 흐름



에 따라 금융시장도 개방했다.

5·31교육개혁에 따라 등장한 게 7차 교육과정이었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처음 시도된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형 교육과정이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평준화한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우열반을 통해 학교 내 비평준화, 학교 내 일류 고등학교를 재 생산하려는 것이었다. 선택형 교육과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입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하는, 부분적인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2009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 교육과정을 없애고 모두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바꾸면서 입시 공부가 더 심해졌다. 시간 표상으로는 문과, 이과 모두 공부할 수 있지만, 입시에 도움되지 않는 과목은 실제로 공부하지 않았다. 선택이 더욱 극단화되다 보니 이과 계열 대학 신입생은 문과 바탕이 없게 돼 버렸다. 이러한 딜레마를 대학에서 제기하니 정부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내놓은 것이다.

21세기에 자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필요하다. 옛날 3차 산업은 더 이상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정보 지식산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다.

창의 융합형 인재가 어떤 사람일까? 스티브 잡스. 삼성이 못 이기는 애플! 인문학적 바탕과 자연과학적 바탕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창의 융합형 인재가 있어야 국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극단적 편식 공부의 한계를 느꼈지만, 그 원인을 수능 체제에서 찾지 않고 교육과정만 건드리고 있다. 무늬만 통합형 교육과정이고 사실은 과거 공통교육과정을 복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포장하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수능 비중을 줄이고, 내신을 늘리고, 내신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가야 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Q.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올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며 “국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의 90%, 전국 역사 교사의 97%가 반대하는 국정 교과서를 정부는 왜 밀어붙이려고 하는가?

A. 교과서 국정화 제도만 보지 말고 그들이 왜 국정화로 가려고 하는지 봐야 한다. 첫째, 그들은 하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고, 해석이 가능하면 안 된다고 본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친일·독재 역사를 가르치고 싶은 것인데 이것이 실패하자 폭력을 쓰는 것이다.

둘째, 역사과 교육과정을 바꾼 것도 동시에 봐야 한다.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고, 건국일 [뉴라이트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삼고 싶어 한다]을 역사의 정통성으로 삼으려 하며,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를 축소해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고수하고자 한다.

이재원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인터뷰

교육대학생 2만 명이 교육재정 삭감에 반대해 동맹휴업을 벌이다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소속 초등 예비교사 2만여 명이 동맹휴업을 했다. 김연오 <벌떡교사들> 편집팀원이 **경인교육대학교 이재원 총학생회장**에게 동맹휴업의 의미와 예비교사들의 요구를 들었다. 이 인터뷰는 동맹휴업 전에 이뤄졌다. — 편집자 주

Q.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맹휴업에 들어갑시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A. 작년 동맹휴업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동맹휴업 당일 교육부와 면담에서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1년 동안 시범운영한 후,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7월 27일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의하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심의를 간소화해 2016~2017년간 500명의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작년 전국 예비교사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간선택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사 정원 감축과 누리고정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지방재정효율화 방안은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맹휴업을 결의했습니다.

현재 교대련 13개 단위 중 11개 학교에서 동맹휴업이 가결됐습니다. 동맹휴업 당일 교대련 중앙위는 교육부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교육부가 작년에 한 약속을 어기고 도리어 시간선택제 교사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A. 예비교사들은 공교육을 해칠 것이 우려되며 현장에서도 외면하고 있는 제도를 ‘청년 고용’이라는 핑계로 지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진정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교사 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악 의도



검정으로 간다 해도 교육과정의 이렇게 바뀐다면 후퇴하는 것이다. 국정화 제도만 보면 안 되는 이유다. 국정화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교과서에서 최근에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까지 확대돼 들어왔다. 도입되는 시기도 1년을 앞당겨 201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는 임기 마지막 해로, 국정화를 현실로 만들어 놓고 정권을 넘겨주려는 의도다.

2009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는 선택형 교육과정이 됐는데, 한국사만 공통필수 과목으로 들어왔다. 이후 한국사만 수능 필수가 됐다. 한국사 국정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친일·독재의 역사는 박정희의 국가자본주의, 산업화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 교과서를 보면 이병철과 정주영의 일대기를 넣고 근대 산업화의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과만이 아니라 사회과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Q. 교육부는 지난 9월 4일 교육과정 총론 발표 후 9월 중 법적 고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A.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화가 왜 문제인지 알아야 한다. 의외로 모른다. 교육 내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장악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작업이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다. 그것의 결과는 길들여진 노동자, 권리 의식이 없는 시민, 권리가 거세당한 노예로서의 인간이다. 그리 되면 자기 지배자에 맞서 단결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하게 된다. 자기해방이 늦어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교육이 늘어나고, 교육의 양이 많아진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 살인적인 경쟁으로 학부모와 학생, 대다수 사람들, 민중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많이 알

려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9월 고시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고시한다고 해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부분 개정 체제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할 기회는 온다. 집중이수제나 수업시수 20% 증감도 조정된 경험이 있다. 법적 고시가 된다 해도 이후에 이 문제점을 알리고 폭로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시도교육감들이 매개가 돼 공동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

Q. 전교조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당적인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교육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국가인원위원회 같은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독점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관료들은 위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교육의 속성상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장기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바꾸기는커녕 제대로 지키기도 힘들다. 교육의 효과는 길게 나타나고, 준비와 결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권력의 교체에 따라 바뀌는 것은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다.

교육은 행정부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다양한 대표들로 이뤄진 위원회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통제 하에 뒤야 한다. 교육은 가치를 다루는 영역이고 아래로부터의 주장이나 문화 속에서 형성돼 가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물론 위 위원회 구조도 국가 권력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보면 알 수 있다. 핀란드의 교육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사회당 정권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정치 권력의 변화 없이 사회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1면에서 이어짐

일부 대의원들은 연가 투쟁에 반대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히 4.24 연가 투쟁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생각이 큰 듯했다.

몹시 쓰리지만,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패배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연가 투쟁 해도 소용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노총 4.24 파업과 전교조의 연가 투쟁 그리고 공무원노조 총회를 발판으로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가 파업을 비난하고 결정적으로 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집행부가 배신적 타격을 한 것이 진정한 패인이었다. 그럼에도 전교조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입장과 연가 투쟁은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고무했고, 마침내 배신한 이충재 전 위원장을 쫓아냈다. 배신한 지도자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는 다음 투쟁을 준비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논쟁 끝에 대의원들 다수는 하반기 연가 투쟁을 지지했다. 상반기에 가장 전투적으로 투쟁했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교조에서 연가 투쟁안이 폐기됐다면 많은 노동자들에게 쓰라린 후퇴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활동가 연가 투쟁 결정은 정치적으로 소중한 의미가 있다.

8월 28일 대의원대회는 많은 대의원들이 지도부보다 왼쪽에 있다는 점도 보여 줬다. 지도부가 ‘활동가’ 수준으로 연가 투쟁 참가 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전 조합원으로 확대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과반에 5표가 부족해 아쉽게 부결됐다. 지도부가 중집 내 연가 투쟁 반대 의견과의 논쟁을 의식하느라 대의원들의 투쟁성을 충분히 읽지 못했던 것 같다. 현장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투쟁을 호소하면 응할 태세가 돼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기층에서 9.23 파업 동참을 최대한 조직하면서, 이를 “노동개혁” 공격과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반대하는 다음 투쟁으로 연결시키는 활동들을 시작해야 한다.

더구나 동맹휴업과 권역별 집회를 통해 약속 받은 ‘1년 시범운영 뒤 원점 재논의’ 약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연장, 심지어 전환요건이 완화된 것은, 정부의 정책을 위해서라면 약속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 정부는 올해 신규 교사 임용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의 대선 공약인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교사를 증원하겠다는 것을

어긴 것입니다. 예비교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 현재 박근혜 정부의 2년 전 ‘OECD 상위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급 당 학생 수는 곧 그 나라의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아직도 과밀한 학급이 많은 현실입니다. 향후 2020년도까지는 초등 학령 인구가 급격한 감소에서 벗어나 연간 1% 내외의 변화를 보이는 안정기에 들어선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비교사들은 재정 ‘효율화’를 명분

으로 교사 정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교사 수급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지방교육재정을 더한층 악화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A. 정부는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것 외에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분배하기로 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 비율이 높은 지방의 경우에는 교육 예산과 교원 수가 함께 줄어들면서 공교

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 등의 보육예산을 빚으로 허덕이는 시도교육청으로 그 재정 부담을 계속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누리과정·초등 돌봄 예산은 결국 올해와 같이 단한 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영향 받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약 포기과 재정 떠넘기기를 당장 멈추고, 국고 지원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예비교사들은 돈의 논리를 효율화로 포장할 뿐인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 악화

교직에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적용하려는 신호탄

정원석(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장)

지난 9월 3일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내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일환으로, 교사들의 임금 체계와 평가 제도도 본격 건드리겠다는 것이다. 연금을 빼앗은 뒤 바로 임금과 노동조건까지 내놓으라는, 정말 악독한 정부다.

임금 체계 개편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성과상여급평가(성과급)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된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 평가(60%)와 교사 평가(40%)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이를 합산해 인사에 반영하고, 교사 평가는 개인성과급 결정에도 활용된다. 교육부는 이를 ‘간소화’라고 포장하지만 처음으로 인사와 보수를 연계시키는 개악이다. 근평과 성과급이 결합하면 교사 간 경쟁과 관리자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 뻔하다. 당장 관리자 평가를 보수에 직접 연계시키진 않았지만, 이번 개악이 성공한다면 언제고 결합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성과급제 폐지를 밝히면서 마치 이번 개악이 개선인 양 포장한다. 그러나 같은 학교 교사들은 모두 같은 등급을 받는 학교성과급의 특성상 근평(인사)과 결합시키는 것이 어려워지지 결코 “교사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가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훨씬 커질 것이다.

정부는 근본에서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싶어 한다.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켜 노동 통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박근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무원도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곧바로 “공무원의 성과급을 확대하고 저성과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위 등급 SS를 신설해 S등급보다 1.5배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의 규모와 차등 폭을 키워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성과급의 폐지로] 개인성과급의 차등률이 당장 상향될 것’이란 얘기를 흘렸다.

성과급제가 확대되면 소수 교사들은 임금이 올라갈지 몰라도, 대다수 교사의 임금은 깎이게 된다. 따라서 임금 체계 개편에 맞서는 것은 임금 삭감에 맞서는 것이다.

교원평가 악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당장 근평과 성과급에 융합되진 않았지만 더 나빠질 우려



가 있다.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강제성을 높이려 한다. 2010년부터 시행한 교원평가는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다. 2011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관련 조항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 이에 반발해 일부 진보 교육감들은 교원평가를 시도 교육청 자체안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줄곧 동료교사평가 참여 거부 방침을 고수해 왔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법적 강제성을 확보해 이러한 반발을 봉쇄하고자 한다.

정부는 법제화의 길을 닦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장기능력향상연수에 ‘표준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가 직접 연수 대상자와 연수 내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교원평가를 전문성 개발에 국한한다지만, 박근혜의 공약대로 근평-성과급과 융합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교원평가는 성과주의 인사와 보수 체계에서 교원의 능력과 성과를 따지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핵심 기제다. 나아가 교육제도의 실패를 교사에게 떠넘기고, 향후 교원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공산이 크다.

교사 노동 통제

교사들이 그토록 반대하는데도 역대 정부들이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본주의 구조에서 교육이 하는 구실과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재생산하는 데서 교육은 보건의료 등과 함께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만큼 교사들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는데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또 다른 배경은 경제 위기다. 미국·영국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육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하는 한편, 국가 통제를 강화했다. 핵심으로는 표준교육과정의 제정,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 등과 더불어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들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자본가들은 생산성이 높고 체제에 순응하는 노동자를 원한다. 교사들을 통제해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계급을 양산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 목적이다. ‘교사들의 직무 분석’, ‘교사들의 자질과 기술 검정’, ‘교육 활동 성과 측정’ 등 같은 계량화 작업을 통해 교사 노동을 통제했다.

교육의 질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교육의 질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 악화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경쟁이 심화돼 교사들의 소통과 협력이 어려워지면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성과급 평가의 정량 지표를 보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어떻게 왜곡될지 짐작할 수 있다. 주당 수업시수, 수업 공개 횟수, 교내외 수업 컨설팅 횟수, 교내외 수업 동아리 활동 참여 실적,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직무연수 이수 시간, 대학원 수강 학점,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연구 개발 실적 등. 이런 양적 지표 압박은 교사로 하여금 실적 쌓기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전면적인 인간 발달”이라는 교육의 목적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국립대학교 교수들에게 업적평가와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중장기적인 기초 연구나 상호 협력

요구되는 융합 연구를 기피하게 되고, 연구 실적 쌓기에 치중해 학생 지도 등 교육 활동에 소홀하게 됐다는 것이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교사의 성과급을 직접 연계한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교육의 실패를 극복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교원 구조조정

조합 내 일부에서는 성과급과 교원평가가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는 듯하다. 투쟁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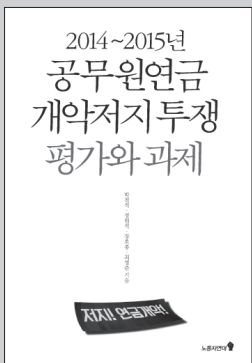
그러나 완전히 막아내진 못했더라도 투쟁의 효과가 있었다. 성과급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교사들은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C등급이 없다. 차등률도 50%(개인성과급 기준)로 공무원의 100%보다 작은 편이다.

교원평가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전교조의 연가 투쟁 등 교사들의 저항에 부딪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다. 인사·보수와의 연계도 좌절됐고 법제화도 되지 못했다.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은 교직 사회에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적용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이것을 디딤돌 삼아 성과연봉제와 교원 구조조정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교사 간 경쟁과 통제가 강화되면 노동조합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교육재정 삭감, 교육과정 개악 등 신자유주의 교육 공세와도 연결돼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직접 건드리는 문제다. 그만큼 현장 교사들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의 불만과 분노를 대중적 행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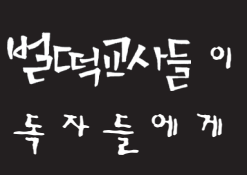
추천 소책자



퍼낸곳 노동자연대 / 122쪽, 값 4,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웹사이트 http://www.workerssolidarity.org



〈벌떡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교사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 노동자들의 투쟁 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는 4면짜리 월간 신문입니다. 매달 20일에 발행됩니다. 〈벌떡교사들〉의 호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1부 연간 정기구독료는 11,000원입니다(우편료 5,000원 포함). 5부 이상 정기구독 시 우편료는 무료입니다.

- ▶ 구독자는 정기구독자가 돼 주세요.
- ▶ 혼자 보기 아까우시죠? 주위 동료 교사들에게도 서너 부 배포해 주세요.
- ▶ 공유하고 싶은 투쟁 경험, 투쟁 전술, 기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죠? 그러면 기고해 주세요. ruleachers@hanmail.net로 보내 주세요. 글 마감은 매달 12일입니다.
- ▶ 얼마라도 괜찮아요, 후원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및 후원금 입금 계좌] 농협 356-0965-6124-13 (예금주 김현옥)